

# 집권 2년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선언

##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통일 대박론' 뒷받침 북핵 고도화 차단 속 남북관계 발전 점진 추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제 빛을 보지 못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올해는 제 역할을 해내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지가 관심이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걸고 진행된 6일 외교·통일·국방부의 통합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 초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에 맞춰졌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새 화두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안보 3개 부처는 북핵 불용인, 북핵 고도화 차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속에서도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현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공통 주제도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설정됐다.

군사적 대비 태세를 굳게 유지하고 우방 및 주변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과 동시에 최근 수년간 끊어지다시피 했던 남북간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대북

지원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일정한 유인책이 북한에 던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비록 국제기구나 해외의 NGO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면 중단했던 농업 분야의 대북 개발협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남북이 지난 5월 3년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이후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연내 사업 착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본격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지원 확대 등이 강조된 것은 정부가 올해 북한의 변화 등 여건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의 개선 기운에도 불구하고, 대북안보태세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보훈하는 나라사랑 교육, 민족과 사료의 보존관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정성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신안 울도·굴도·도덕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 신발전지역 축진지구 지정 2017년 민자 4천억 투입

신안 울도, 굴도, 도덕도가 '신발전지역 발전축진지구'로 지정돼 오는 2017년까지 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된다.

전남도는 6일 "신안의 3개 섬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로부터 신발전지역 발전축진지구로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신발전지역 발전축진지구로 지정된 섬은 지도읍 울도(22만7730㎡)와 임자면 굴도(7만9340㎡), 중도면 도덕도(7만7851㎡)다.

울도에는 2015년까지 민간자본 1600억 원을 투입해 동백동산, 열대우림 정원 및 해안산책로 등이 들어서는 '울도 식물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굴도에는 2015년까지 민간자본 1320억 원을 투입, 섬 문화체험관, 펜션단지 및 음식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굴도 해양펜션단지'가 들어선다.

### ■굴도·도덕도·울도 발전계획



또 도덕도에는 2017년까지 민간자본 1071억 원을 유치해 해저유물박물관, 테라스하우스와 야의 수영장 등이 포함된 '도덕도 해양리조트'가 조성된다.

3개 발전축진지구는 사업 시행 예정자가 사전 토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이들 사업을 통해 9441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5764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사회지도층도

### 예비군훈련 받는다

앞으로 사회지도층도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6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동원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개선해 예비군 복무 관련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군·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차관급 이상 관료, 시·도 교육감 등 사회지도층은 예비군 훈련 및 전시 동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행 제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원훈련, 동미합훈련, 향방 기본훈련, 향방 작계훈련 등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예비군 8년차로서 훈련을 받지는 않지만 전시 동원 의무를 부과받게 됐다.

국방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재학생의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8학기(4년제 일반대학 기준)로 제한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8학기(수업연한)를 이수하고도 졸업하지 못한 유급자나 졸업유예자 등은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北 가족 그리워 눈물만...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동3가 대한적십자사를 찾은 이산가족 이은수(77세)씨가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해도 해주시에 가족을 남기고 온 이씨는 이번 상봉대상자는 아니지만 추가 상봉 대상자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날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민원실을 찾았다.

연습은

## 北, 이산상봉 합의 하루만에 대남 압박

### 한미군사연습·비방중단 요구... "합의 이행 재고할 수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경경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은 6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에 한미군사연습과 비방중단을 요구하며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등의 표현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일단 북한이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대남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을 대가로 비료, 식량

등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를 주도할 카드로 내세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특히 북한은 이날 말부터 시작할 한미군사연습 '키 리플브'와 '독수리 연습'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전쟁연습'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며서 계속 남한의 대북정책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이미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한미군사연습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지난 3일 현혹병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쉽게 합의한 것도 결국 한미군사연습 비난에 활용하려는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남북이 어렵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나을 앞두고 남한 정부가 남북대화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연기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의 일정이 작년처럼 무산되거나 연기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상황에서 남북간 합의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 태안주민, 여수서 '보은의 기름제거'

### 오늘 방제활동... 광주시도 물품 지원 나서

2007년 12월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충남 태안 지역 주민과 군청직원들이 여수 동계에 나선다. 2007년 태안을 찾아 기름제거 작업을 돕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던 여수 주민에게 보은(報恩)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40여명은 7일 새벽 태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수에서 방제활동을 할 계획이다. 태안지역 이장단과 어촌계장 등 30여명도

이들은 특히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기로 했다. 태안군청 공무원들은 급식차를 몰고 가 기름방제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우리가 어려울 때 (여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품앗이를 할 차례"라고 말했다.

1995년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고

통을 겪었던 여수주민들은 태안의 기름유출 피해 소식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는 전 국민이 태안을 돕는 운동으로 확대됐고, 어려울 때 힘을 보태는 한국의 '품앗이 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도 여수 기름유출사고 현장의 기름제거를 위한 지원 물품 모으기에 나선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6일 간부회의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비춰볼 때 해안가 기름 제거에 많은 물품이 소모된다"면서 "면류의 헌옷이나 코팅된 장갑 등을 모아 여수에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일까지 시·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기름을 쉽게 빨아들일 수 있는 면류의 헌옷이나 수건, 코팅된 장갑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또 여수에서 자원봉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북한 이탈주민도 병역의무 수행해야"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6일 병역과 대학특례입학에 관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통일부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원하면 징병검사를 병역 면제받을 수 있다 보니 지금까지

지 군대에 간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갈등 요인이 됐다고 대통합위는 설명했다.

대통합위는 이에 따라 입국 후 보호기간(5년) 이내인 병역의무 대상자는 현행 제도에 따르되 그 외에는 일반 국민과 같이 징병검사를 받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했다.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 14평(실 9평) 1세대

- 15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 77평(실 44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 29평(실 18평) 3세대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 53평(실 33평) 1세대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